

전문건설 살려야 건설산업이 산다

특별기고 : 노재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2013년 11월 25일 (월)

노재화 ☎ 1111



연말을 목전에 둔 이맘때면 으레 한해를 정리하고 다음 해를 바라보는 것이 관례다. 건설업계에서도 올해 결산과 내년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건설수주는 약 90조원으로 2005년의 99조원 이후 8년 만에 100조원을 하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내년도 건설수주는 어떤 곳에서는 91조원이 될 것이라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93조원이 될 것이라고 하여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올해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건설산업은 유효수요 부족으로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이 증가하고 신규투자는 위축되며 실업은 늘어나는 경기후퇴기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적극적인 수요확대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재원 부족으로 적극적인 부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째인데도 SOC투자는 사실상 정체하고 있으며 신규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주택 부문에는 아직도 미분양 재고가 남아 있다. 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거래 촉진에 필요한 제도보완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효과는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기위축 국면의 꼬리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면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위기는 건설업계 전체로 확산되었다. 100대 종합건설업체 중 구조조정 중인 업체 수가 해마다 멤버를 바꿔가며 20개를 넘는 수준을 몇 년째 유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도 하락하고 있어 수주를 해도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하도급을 주로 하는 전문건설업계의 고충은 더 심각하다.

전문건설업 수주액이 감소했고 그중 전문건설업계의 주력인 하도급실적은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물량이 줄어 그나마 공사를 수주하기도 쉽지 않다. 공사를 수주한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은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근거로 가격이 정해진 공사를 최저가로 수주한 원도급업체가 저가에 하도급을 하다 보니, 전문건설업체는 이익을 내기는 고사하고 적자가 쌓인다. 건설산업의 하부를 지탱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생존기반이 붕괴하고 있는 형편이다.

건설산업을 살리려면 전문건설을 먼저 살려야 한다. 우선 실행가에 미치지 못하는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이는 하도급을 하는 전문건설업체뿐 아니라 건설산업 구성원 모두에게 절실한 것이다.

불공정거래 척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원도급업체가 저가공사를 수주하고서는 그 부담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방법이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늘리는 가장 손쉬운 수법으로 통용되고 있다. 불공정거래를 적자공사를 흑자공사로 둔갑시키는 비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6월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방안'의 명칭에 나타나듯 불공정거래는 정부조차 '관행'으로 인식할 정도로 뿌리 깊다. 최근에는 해외공사 현장에서 우리나라 건설업체 간에 일어나는 불공정하도급이 문제가 되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면서 해외까지 불공정거래를 수출하고 있다니 국제적 망신이 우려된다.

건설부조리를 방지하는 한편 전문건설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건설산업을 창조경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주계약자공동도급이나 분리발주와 같이 도급단계를 축소하는 제도 활용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해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곤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500억원 이상 정부공사에 적용하겠다는 기준을 고수하다 보니 적절한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진실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에 의지가 있다면 적용기준을 대폭 낮추어 발주기관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엉뚱한 방향으로 길을 잡고 있는 전문공사 분리발주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당초 여당과 정부가 손톱 밑 가시를 뽑는다며 분리발주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할 때만 해도 곧 시행할 것처럼 애드벌룬을 띄우더니 이제 풍선의 바람이 거의 다 빠져가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은 근래 정부가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정책기조를 옮겨가고 있다는 사인을 자주 내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업계에서도 경제민주화는 한물 간 것 아니냐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투자확대와 고용증대를 위해 대기업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경제민주화 정책 때문에 투자가 부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도급부조리를 척결하고 분리발주와 같은 경제민주화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인 전문건설업체를 살려야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고용도 늘어나고 경제활성화의 전기도 마련할 수 있다.